

산림기술인들이 알아둬야 할 산림철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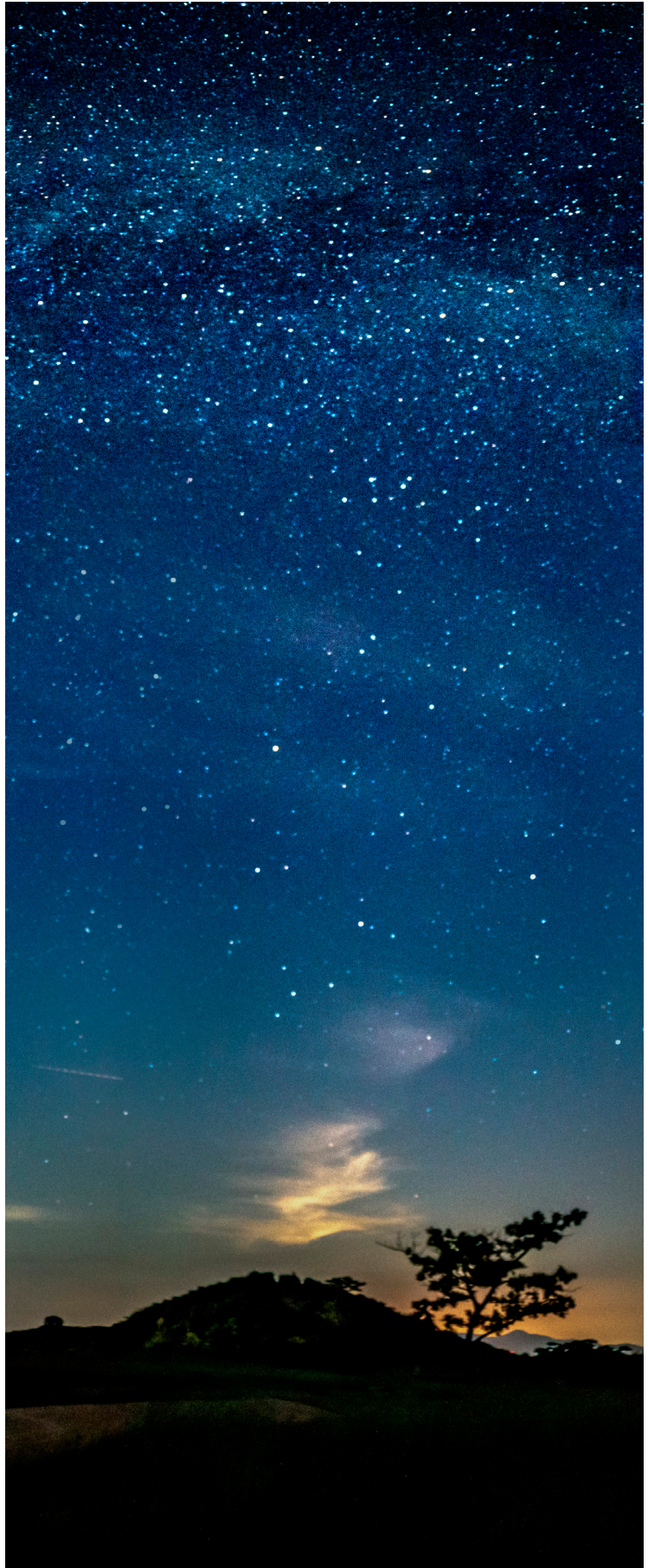
- 두번째 이야기 -

글_한국산림기술인회 자문단 자문위원
마상규 자문단장

산림 자본관리와 사회적 투자

산림 자본은 산림 축적이다. 자본으로서의 가치를 발휘하기까지는 장기간의 시간이 소요된다. 온대림 지역에서는 자본으로서의 가치를 발휘하기까지는 100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하게 되고 성장과정에 따라 조림, 숲 가꾸기, 간벌과 수확 생산이라는 작업 단계를 거치게 된다. 정상적으로 숲을 관리하게 되면 100년간 소요되는 노동력을 자원조성 사업에 100일, 생산사업에 100일이 투입되게 되며, 채적 생산량은 100년간 600m³이 된다.

전업적으로 노동 소득을 얻고자 할 경우 100ha의 산지가 있어야 하고 지속 생산구조를 갖췄다면 연간 600m³을 전업으로 경영하는 것과 같다. 100ha의 산지에 이상적인 숲 구조를 갖추고 있다면 매년 600m³을 생산하는 기업을 경영할 수 있다. 산주가 가족노동으로 경영을 한다면 기업성을 기대할 수도 있다.



문제는 우리나라 산림구조가 50년생 내외로 계속 투자해야 할 상황이고 이상적인 숲 구조로 유도해 나가기 위해서는 현금 투자가 이뤄져야 할 상황이나 소득이 없으므로 인해 산주 투자를 기대할 수도 없다. 우리 산림은 숲아베기(간벌)사업과 수종갱신을 겸하는 수확 생산 사업시기에 있으나 현금 투자환경이 조성돼 있지 않아 산림 자본관리가 방임돼 있는 상황이다.

반면에 산림의 건강성과 활력도 유지, 임분 형질 개량, 산림 재산 관리, 고용관리, 공업원료와 바이오 메스 공급을 위해서는 투자가 확대돼야 함에도 산업으로서의 임업 투자는 정체돼 있다. 산림생태계의 보호와 산림의 문화 복지 등 서비스 사업은 정부 사업으로 추진되고는 있으나 경제사회적 가치 생산을 위한 투자까지도 확대될 수 있는 사회적 투자 제도 발전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산림 자본 관리를 산주에게만 맡겨둘 경우는 국가 사회에서 요구되고 있는 다양한 산림가치를 생산할 수가 없게 되고 더욱이 경제 사회적 기능 발전은 기대할 수가 없게 된다.

산림자본은 산주 소득관리 자본이지만 지역사회 주민의 생활과도 연계된 공익성 자본으로서의 가치가 높기 때문에 사회적 투자 지원과 사회적 서비스가 병행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갖춰야 할 대상이다. 과거의 임업은 원시림과 성숙림을 대상으로 벌채 생산하는 산업이었으나, 미래의 임업은 산림의 다양한 가치가 지속될 수 있는 다목적 산림경영을 할 수 있는 산업으로 발전돼야 하므로 산주와 지역사회에서 협력해 투자하는 사회적 투자체계를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그래야 공익기능을 기대할 수 있다.

국가 사회에서 설정한 이상림(법정림)으로 산림 관리체계가 되기 위해서는 경영기반 시설 지원, 간벌사업 지원, 다층림 조성 및 생산사업을 지원하는 사회적 합의와 지원 규모의 확대책 등이 있어야 한다. 산림 자본관리는 산주 투자와 사회적 투자가 병행할 수 있는 공공경제자본으로 관리될 수 있어야 산림·임업 경영이 사회적 산업으로 경쟁력이 있게 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도 또한 증대될 수 있으므로 산림 자본관리에 새로운 경제사상이 요구되고 있다.

사회적 투자가 강화되면 산림·임업 경영 의사결정에도 지역사회가 참여하게 되므로 사회적 협동 경영이 활성화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될 것이다. 우리 산림은 국민들의 협력으로 산림녹화 성공국이 됐으므로 산림·임업을 지속 가능하게 경영할 수 있는 이상적인 산림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산주와 시민 그리고 기술자들이 협력하는 평화로운 경영 체계를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산림을 기후 관리, 물관리, 경관관리와 함께 공공자본으로 관리될 수 있게 사회적 투자를 확대시킬 수 있는 홍보도 활성화돼야 하고 산림경영 경제 사상도 발전시켜 나가야 할 시대다.

산지 이용구분과 경영단지 관리

산지는 지형의 형태에 따라 평지, 구릉지 산악지대와 고산지대로 구분되고 경사도에 따라 완경사지, 급경사지, 절험지 등으로 구성돼 있다. 토지의 생산력에 따라 경제림과 비경제림 지역이 있고 산림의 소유구조에 따라 국공사유림으로 구분되며, 소유 규모도 다양한 것이 산지다. 산지를 재화 생산 또는 서비스림으로 경영하기 위해서는 산지 구획 이용의 관리체계를 과학화 시켜 나가야 한다.

산지를 산림경영 목적으로 경영하기 위해서는 먼저 산림의 생산력을 알아둬야 한다. 수확표를 분석해 보면 산림 생산력 구분은 다음과 같다.

경제성	경제림 (m / ha,년)			비경제림 (m / ha,년)
	상	중	하	
지위				
침엽수	12	8	4	
활엽수	6	4	2	
평균	9	6	3	1이하

표1 = 산림의 생산력 구분



온대지방의 총평균 성장량은 ha당 연간 평균 6m³/ha에 해당이 된다. 이상적인 산림구조를 갖추고 있다면 매년 ha당 6m³의 입목을 벌채 이용할 수 있음을 뜻한다. 산림 생산 관리를 위해서는 적정규모의 관리 단위가 있어야 한다. 연간 사업 관리를 하는 단위, 경영행정적 관리 단위, 작업 및 노동 관리 단위와 기업적 경영과 정책적 관리 단위 등이 있어야 계획적 관리가 가능하고 효율성이 있게 된다.

사업 관리 단위는 사업내용이 동일한 산지로 지번 단위 또는 소반 단위가 되게 되며, 면적 크기는 1ha 이상에서 임반 단위의 크기까지 관리할 수가 없다. 일반은 경영행정 관리의 단위로 산림 관리 행정과 경영 관리 행정상 관리 목적이 동일한 관리 단위로 면적 크기는 20ha~100ha 까지 다양하게 나타나게 된다. 소반은 작업 목적 관리를 위해 사업 종이 다를 경우 임시로 구획해 이용하고 작업 목적이 달성됐을 시에는 구획 관리의 임무가 살아지게 된다.

경영구 단위는 경영관리를 위한 최소 단위로 입목 생산량이 5000m³ 이상은 돼야 전문 산림기술자를 고용할 수 있고 책임 있게 관리할 수가 있다. 또한 산림노동자를 5인 이상 상시고용할 수 있는 규모가 된다.

경영구 면적 크기로는 500~2000ha는 돼야 한다. 경영구 단위는 산림기술자들이 종합적인 작업관리를 할 수 있는 단위며, 경영구 단위가 커지면 업무량을 고려해 경영 인력을 증원시켜야 한다. 경영구 단위는 경영계획 편성과 연간 사업 관리를 하는 단위가 되므로 토지생산력과 지번 경계 및 지방행정경계를 고려해 구획하고 이용 관리 대책이 수립돼야 체계적으로 경영관리와 행정관리가 가능할 수 있게 된다.

현실을 보면 산주의 지번 단위로 사업 관리가 이뤄지고 있을뿐 상위계획과 중간계획 없이 사업만 이뤄지고 있다. 이는 목표 없이 항해하는 것과 같고 산림정책과 행정관리의 효율성이 낮은 관리 형태에 해당된다. 우선 임반 단위 규모로 30~50ha 이상의 단지를 구획해 사업 관리 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하고 이어 경영구 구획과 상위 경영 단지를 구획해 체계적 경영관리가 가능할 수 있는 시대로 발전 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기업적 경영과 임산물 시장을 연계할 수 있는 경영규모를 갖추기 위해서는 최소한 연간 1만㎡ 이상을 생산 공급할 수 있는 경영 단지를 개발해야 할 것이다. 경영단지 크기는 1만ha 이상은 돼야 전문성이 있는 경영자를 고용할 수 있고 기업 경영이 가능한 직장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게 된다.

산림의 공간 관리와 시간관리 계획 수립

산림청은 국토 전체를 대상으로 숲을 조성하고 관리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 운영할 수 있다. 토지이용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을 부처 간 협의에 의하게 되고 각 부처는 공간 이용에 대한 자체 계획을 수립해 관리하는 것은 의무에 해당된다. 이중 산지에 대한 공간 관리 계획은 산림청의 기본 임무가 된다.

산림공간에 대한 계획은 산림생태계의 가치와 사회적 수요를 진단해 공간별로 산림기능을 배정하고 기능이 지속화될 수 있도록 관리할 수 있게 체계화시키는 일이다. 이를 정책관리 측면에서 기본계획이라 한다. 산림공간에 대한 사회적 수요에 따라 보호림, 생산림, 서비스림이 있게 되고 기능이 중첩돼 관리해야 할 다목적 기능도 배정해 관리하게 된다.

보호림

기후보호, 수자원 보호, 토양보전, 비오름 및 자연보호, 재난예방 등 보호 관리가 돼야 할 산림

생산림

경제적 생산림, 비경제림

서비스림

경관, 휴양복지, 교육 및 시침림, 채종림, 묘지, 산림 정원 등 서비스 관리가 대상 되는 산림

산림공간 관리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단위별로 도상에 산림기능을 배치하고 관리 지침을 제시해 줘야 하며, 경영계획은 이를 반영해 시간관리 계획을 세우게 된다. 시간 관리 계획에는 산림공간별로 주어진 산림기능이 증대되고 지속될 수 있게 경영계획을 세우게 되며, 계획 관리의 기간에 따라 중장기 계획과 단기 계획으로 구분 관리하게 된다.

장기 계획은 산림기능관리를 위한 경영목표를 제시하는 계획으로 경영목표 수종, 생산목품, 영급배치, 갱신작업종을 관리하는 계획이 제시돼야 한다. 중기 경영계획을 통상 산림경영계획이라 하며, 경영목표관리를 위한 중간 통제와 조정기능이 있다. 계획의 내용은 전문 계획과 종합 계획으로 구성된다. 단기 시간 계획으로는 연간 사업 설계와 작업 실행계획이 이에 해당된다. 산림 계획 관리는 산림생태계를 지역사회에서 요구하는 이상림으로 유도하고 이를 기능이 지속되게 통제 조정하는 산림 경영행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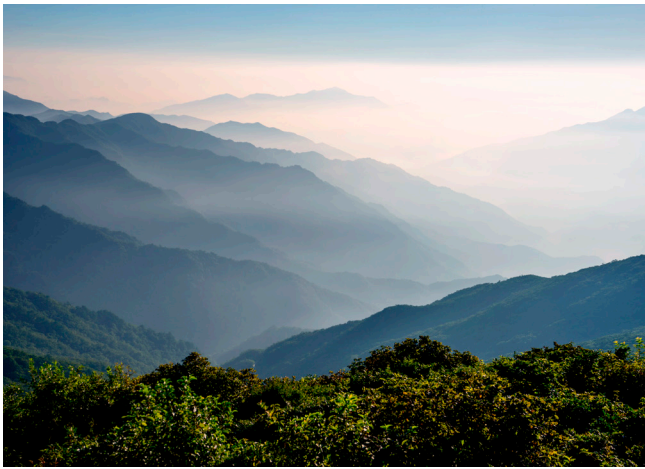
산림경영계획

→ 임소반별 전문 계획으로 조림, 숲가꾸기, 생산과 임도 등 기반 시설 계획이 있다.

→ 경영구별 종합 계획으로 사업별 종합 계획, 재정관리 계획, 고용관리 계획이 있다.

산림 계획 관리를 체계화시키기 위해서는 중앙정부가 산림경영관리의 강령을 지방정부가 산림경영 기본계획을 수립해 제시해야 하며, 이를 통제 조정하기 위한 산림경영 계획 편성 지원과 평가관리를 할 수 있는 조직 운영 체계가 필요하다. 연간 산림 사업을 산림경영계획 안에서 조정할 수 있게 한다면 이상림으로 유도하고 산림기능들이 지속 가능하게 경영되도록 통제가 가능하다.

계획적 관리가 이뤄지지 않을 시에는 지속적 산림 관리 구조가 훼손되고 이상적인 산림경영이 어렵게 된다. 우리는 이상적인 목표림을 설정하고 중장기 계획 관리를 통해 유도해 나가야 할 산림정비 시대에 와 있다.



산림의 공공기능을 관리할 때에는 소유에 관계없이 협력해 공공기능이 유지되게 해야 할 것이다. 임도 등 경영기반 시설은 공동으로 시설하고 관리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임산물 시장 관리도 국공사유림 공동으로 대처할 경우 소득성이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산주와 지역주민은 각각 이해관계를 관리하기 위해서 소통과 협력할 수 있는 환경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 문제를 방치하면 갈등과 비효율 및 비합리적인 산림 관리로 인해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도가 낮은 산림이 된다. 또한 경쟁력을 살려나갈 수 없는 임업으로 방치시키는 현상도 나타나게 될 것이다.

산림경영 시에는 정부와 산주 및 지역주민 그리고 임산물 수요자들이 소통하고 협력하는 사회가 돼야 하고 이해관계자들이 협동해 경영하는 체계를 만들어 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산림경영이 가능한 단지를 구획해 주고 이해관계자들이 동의할 수 있는 산림경영 기본계획과 경영계획을 수립해 주며, 경영 의사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조직을 마련해 줘야 할 것이다.

산림의 사회적 협동화 경영

산림은 다양한 생명들의 삶터이고, 지역민들의 일터이면서 쉼터의 기능이 있다. 산주에게는 일터가 될 수도 있고 소득을 기대하는 경제활동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산림의 가치와 기능으로 보아 이해관계자들은 민족의 미래를 생각해야 하는 국가가 있고 산지를 소유하고 소득을 기대하는 산주가 있다. 산림의 다양한 공공가치를 요구하는 지역 주민이 있으며, 임산물을 이용하는 가공 업체도 있다.

산림의 가치와 기능이 동일함에도 소유자들이 상이할 경우 경영관리 방식을 달리하고자 할 것이며, 소득성이 낮고 전문성도 없을 시는 산림을 방임시키는 산주도 있게 돼 산림경영 효율이 낮거나 산림을 방임시키고 있는 등 지역사회관리 측면에서 보면 자원관리의 낭비에 해당된다. 일자리가 없거나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 지역이 과소화되거나 소멸될 수 있는 위험도 있게 된다.



산림기술자는 이해관계자들에게 전문지식과 정보를 갖고 갈등을 조정하는 평화 전도사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국가 사회는 산림기술자들이 전문적으로 산림경영관리에 참여할 수 있는 조직과 체계를 마련해 줘야 사회적 협동 경영이 가능하게 된다. 산림현장을 보면 이해관계자들 간의 갈등을 조정하고 생산성을 관리하는 조직과 체계가 돼있지 않고 산림기술자들은 사업 관리만 하는 소극적 활동에 머물러 있다. 이로 인해 목재 생산업은 정체돼 있고 임업의 경제적 사회적 기여도가 낮아 지역사회에서의 관심도가 낮은 상황에 있다.

산림의 가치와 기능 관리의 특성상 국공사유림이 협동하고 산주와 주민 간에는 협력하며, 정부는 이해관계자를 조정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산림기술자를 산림경영자로 고용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 줘야 한다. 그래야 책임 있고 전문적이며, 생산성 있는 산림, 임업 경영이 가능하게 된다. 특히 민유림은 협동 경영 체계를 마련해 줘야 지속 가능한 경영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산림의 사회적 협동화 경영 시대를 열어갈 수 있도록 산림경영 방식에 대한 홍보를 강화시킬 때다.

